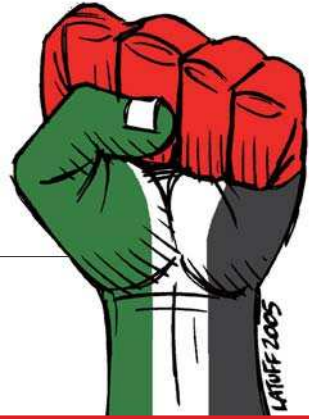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
5면

위기의 정의당
6면

대법원의 박유하 무죄 판결 비판
8면

팔레스타인
저항 2~4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제2의 나크바,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험

관련 기사 2~4면

타리크 알리가 말한다

“베트남, 알제리, 하마스: 해방 운동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가 10월 26일 런던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타리크 알리(사진)가 연설한 내용의 일부다. 600석 강당을 가득 메운 이날 강연에서는 가자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한 팔레스타인인 라파트 알라레,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일란 파페, 아일랜드 '이윤보다 인간을(PBP) 소속 국회의원 리처드 보이드 배럿, 유대계 청년 사회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소피아 비치가 타리크 알리와 함께 연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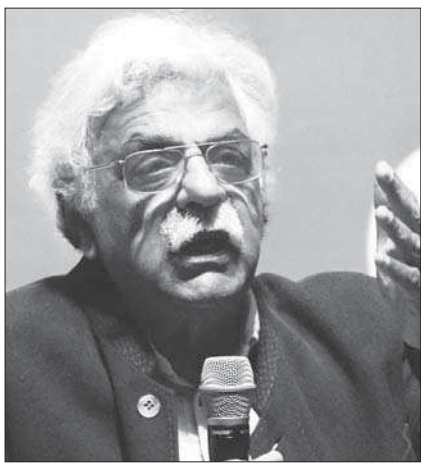


사진 출처: 베니모리 문화부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우리가 왔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봉쇄를 해제하라’ 하고 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실 매우 기뻐했습니다. 물론 어디서든 민간인이 죽는다는 것이 기쁘지는 않았죠.

그때 저는 베트남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저항 세력] 당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사이공의 한 카페를 폭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했다. 우리가 터뜨린 곳은 모두 미군이 사용하던 곳이다. 우리도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폭격은 미국이 베트남을 떠나야 중단될 것이다.”

알제리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알제리 전투》를 권하고 싶은데요, 반제국주의를 다룬 가장 뛰어난 서구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민족 해방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영화에서, 한 저항 세력 투사에게 왜 카페를 폭격해 프랑스인 가족들을 살해했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사는 프랑스가 [저항 세력에게] 공군을 지원해 준다면 폭격이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해방 운동이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무장시킨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언제나 폭격할 수 있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처음으로 반격을 하려 하자, [이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반응은] 비난 일변도였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이집트 카이로, 모로코 라바트의 거리에서는 그런 비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르단 국왕과 왕비가 오늘날 서방 정치인한테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포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름 아닌 요르단 전제 군주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르단 수도 암만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50만 명의 공무리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매수된 국가들, 특히 이집트의 엘시시는 자기 미래가 미국의 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매수됐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 운동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인종 학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종 학살인 벨기에의 콩고인 학살과 같은 규모의 인종 학살은 아니죠.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자행한]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같은 인종 학살도 아닙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 인종 학살된 홀로코스트와 비슷한 정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팔레스타인인 살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종 학살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정치인들도 모두 그걸 압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뭐 어찌겠냐고 합니다.

학살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7년 이스



사진 출처: Activestills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거부하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라엘은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수많은 잔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스라엘은 철수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지금 거리에서 행진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우리는 거리에서 시위할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에 남은 몇 안 되는 관창은 사람들이 유대인 혐오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우리가 [노동당 대표 키타 스타머가 이스라엘의 팔

레스타인 공격 지지를 당론으로 삼은 것에 항의해] 노동당을 탈당한 지방의원들에게 연대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그들과 결별할 기회입니다. 네타냐후와 그 정부에 속한 노골적인 파시스트들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들이 가자 지구 봉쇄를 끝낼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말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거부하고 계속 나아갈 것이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처 Socialist Worker,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s undoubtedly genocide” Tariq Ali and others speak out (2023. 10. 27) / 번역 김동욱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제2의 나크바,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험

10월 28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군은 탱크가 가자 지구로 진입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몇 시간 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전쟁이 2단계에 돌입했다”고 선포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정권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말살하려 살인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이미 가자 지구 거주 팔레스타인인 거의 150만 명을 살던 곳에서 내쫓았다. 움직이는 것은 누구든 사살할 수 있는 자유사격 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스라엘 정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인 가자 지구’를 이제 세계 최대의 묘지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 폭사하거나 타 죽지 않은 팔레스타인인들은 모조리 추방해서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이라는 대재앙)를 소름 끼치게 재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스라엘이 당초 예상보다 이번 공격을 늦게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 주저함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참패를 겪을까 봐, 혹은 군세가 계속 소모되는 수렁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다.

결국 네타냐후의 정치적 앞날은 그가 얼마나 무자비한 자로 비칠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자기 극우 내각을 만족시키려면 팔레스타인인들을 마음껏 공격해야 할 것이다.

네타냐후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침공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지는 것이다. 10월 19일 이스라엘인 65퍼센트가 가자 지구 지상군 침공을 지지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인질 일부를 석방하기 시작한 10월 26일에는 단 29퍼센트만이 지상군 침공을 지지했다.

인종차별 프로파간다와 공공연한 인종 학살 요구가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

어지는 길을 닦았다. 네타냐후의 정당인 리쿠드당 소속 국회의원인 아리엘 칼너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 목표는 나크바다! 1948년 나크바도 빛이 바랄 그런 나크바 말이다.”

나크바

1948년 팔레스타인인 대학살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참전 군인 한 명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족, 어머니, 아이들에 관한 기억을 지워 버려야” 한다고 했다.

95세의 에즈라 야친은 이번에 소집된 이스라엘의 30만 예비군 중 한 명이다. 야친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을 할 것이다. 지난주에 야친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리를 거두라. 저들을 끝장내라. 아무도 살려 두지 마라. 저들의 기억을 지워 버려라. 이 짐승들을 더는 살려 뒀선 안 된다.”

이스라엘의 살인 기계가 기쁠 수 있는 든든한 동맹이 있다. 친기업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에 이렇게 썼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려 대형 항공모함 두 대를 보냈다.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세계 대부분이 믿는 시점에 20만 톤짜리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아랍 대중이 격분해 그 지역의 친서방 정권들을 끌어내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스라엘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정치 이력 내내 거듭, 그리고 가장 최근인 11개월 전에 말했듯, “만약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미국은 그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 냈어야 할 것이다.”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이윤과 권력을 이 지역에서 보장하는 가장 믿을 만한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규탄하는 운동에 나서자.



10월 30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paper.org



wsppaper.org/
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리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임장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paper.org



9 772005 821003

44

팔레스타인 문제

두 국가 방안이 아니라 민주적·세속적 단일 국가 창전이 대안이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벌이는 만행으로 전 세계에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끝낼 길은 무엇인가 같은 핵심적 물음도 제기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에서는 이른바 ‘두 국가 방안’이 유력한 해법으로 추진돼 왔다. 두 국가 방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의 국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국제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두 국가 방안에 기초해,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세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여긴다. 평화적으로 팔레스타인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줄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 방안 약속을 어긴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국가 방안은 이스라엘 국가와 그 국가의 기초가 되는 인종 분리주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원주민들을 강탈해 세운 국가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서안과 가자 지구는 물론이고 레바논·요르단·시리아 등 주변 아랍 나라들로 피난 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분노하며, 빼앗긴 터전을 되찾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열망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갈등이 끊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선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안보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과거 미국처럼 선주민들을 거의 말살하는 것



두 국가 방안의 실제 지붕 없는 감옥이 된 가자

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유대인 정착자들이 착취하는 이등 시민으로 받아들이 수도 없다. 6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유대인만의 배타적 단일 국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거듭 전쟁을 벌였다. 게다가 지금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이스라엘 극우들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아예 끝내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 전부를 역사적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완전히 쫓아내 버리고 싶어 한다.

오슬로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일부를 포섭해, 인티파다 저항을 통제하려고 했을 뿐이다. ‘평화 프로세스’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이스라엘은 토지 강탈과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지속했고, 분리 장벽을 곳곳에 세우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계속 통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다. 서안 지구에서 물 같은 주요 자원도 모두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분리 장벽에 둘러싸인 ‘자치’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며 외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외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구실을 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두 국가 방안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당연히 커져 온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해방을 위해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그 열강과 손잡은 아랍 정권들과 맞서야 함을 뜻한다. 즉, 중동의 기존 질서와 대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전략은 아랍 세계 전체의 근본적 변화 전망과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같은 기존 저항 세력은 아랍 정권들의 지원에 의존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 지배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통제해야 했고, 아랍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대중 투쟁과도 거리를 뒀다.

이런 전략은 해방 운동의 약점이 됐다. 영웅적인 무장 투쟁을 벌였음에도 이내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끝내 ‘두 국가 방안’ 같은 타협으로 후퇴했던 까닭이다.

그러자 하마스가 오슬로 협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떠올랐다. 2000년에 시작된 2차 인티파다에서 하마스는 중심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하마스도 본질적으로 같은 전략을 추구해 왔다.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연안 왕정들은 물론이고 이란과 시리아 정권 등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 때문에 하마스도 아랍 대중의 저항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못한다. 2011년 바레인에서 대중 항쟁이 분쇄된 후 하마스 지도자가 바레인 정부의 ‘개혁’을 칭송한 것은 이런 약점을 보여 준 사례의 하나다.

이제 하마스도 ‘두 국가’ 방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와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1967년 전쟁 때 점령한 영토(예루살렘 동부, 서안, 가자)에서 모두 철수하면,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과 “한 세대에 걸친 장기 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이에 동

의할 때까지 무장 저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하마스가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를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국가와 중동의 기존 질서가 건재하는 한, 하마스식 ‘두 국가 방안’도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공상

두 국가 방안은 진정한 해법이 아닌 공상일 뿐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인종 분리주의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를 해체하고, 팔레스타인에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 국가에서는 무슬림, 유대인, 그리스도인 등이 모두 평등하게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대안이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지 75년이나 지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무슬림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생하며 살아온 훨씬 더 긴 역사가 있다.

팔레스타인 저항은 아랍 대중이 제국주의와 자국 정권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도록 고무할 수 있다. 이미 연대 시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방과 중동 지배자들은 이번 하마스의 저항이 중동 세계의 반란으로 이어질까 봐 염려한다.

특히, 가자 지구와 이웃한 이집트에서 독재 정권의 견제와 탄압을 뚫고 거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10월 27일 이집트 사회주의자 호삼 엘하말라위는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 거리 시위가 살아난 것은 [2차 인티파다 연대 운동이 일어난] 2000년대 초반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경제 위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전쟁은 더 큰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는 서방과 아랍 지배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아랍 혁명의 승리는 팔레스타인에서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김영익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탈북민 강제복송

윤석열 정부의 비난은 위선일 뿐

임준형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10월 초 강제복송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문외에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보고 적발 시 강제복송을 야멸차게 고집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복송하지 못하고 억류된 탈북민이 2600여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8월 북한이 북·중 국경을 개방하자, 이들의 강제복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복송된 탈북민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단속과 복송에 대한 탈북민의 두려움은 엄청나다. 만삭의 몸으로 중국 공안을 맞닥뜨린 탈북 여성이 평소 같으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도망친 일화가 있을 정도다.(강동완·라종역, 《북조선 환향녀》)

탈북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탈북 여성은 단속을 피하는 대가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한다. 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일해야 한다.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복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유엔 인권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복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마치 탈북민을 위하는 양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선이다.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을 저지하려고 진정성 있게 나서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그간 우파 정부들은 탈북민을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하며 냉혹하게 다루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민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



국경 장벽 영화 <크로싱>에서 중국 공안이 탈북민들의 대사관 진입을 제지하는 장면

지 않고 제3국에 수용소를 지어 수용하려 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그 여동생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뒤 추방했다. 윤석열은 바로 이 조작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의 신변 보호와 국내 이송 지원 업무를 하는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업무팀의 예산을 삭감했다. 2020년 약 21억 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2021~22년에 19억 원, 올해는 16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를 15억 5400만 원으로 더 줄였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한국식 내로남불

남한 정부가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대하는 것은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 또한 이는 남한에 가족이나 지인이 별로 없는 탈북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탈북민의 극도로 열악하고 고립된 처지가 다시금 드러났다.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를 보면, 한국에 온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5시간, 월 평균 임금은 238만 원이었다. 한국 전체 평균보다 5시간 더 일하지만 임금은 50만 원 적은 것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9.2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3.8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6.1퍼센트로 곱절이나 높았다.

또, 통일부의 자료를 보면 2022년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6퍼센트로

한국 전체 4.8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축 예산으로 복지를 더 축소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복송이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내쫓으려 한다. 지난 3월에는 한 러시아인 난민이 이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9월 기준 한국 정부의 누적 난민 인정률은 2.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니 중국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해도 윤석열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박홍근, 윤호중 등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치중하느라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진 탓에 탈북민 강제복송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북여민을 강제복송했고, 민주당은 지금도 이를 두둔한다. 중국 정부에 할 말이 없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양대 정당은 도inken개진인 것이다.

탈북민을 방어해야 한다

탈북민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과 남북 대결로 점철된 한반도 최근 역사의 희생자들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로막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잠재적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때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남한 사회로 진입하고 나서도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북한에 남은 가족과 교류하기 힘들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탈북민은 잠재적 간첩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북한을 부정하고 남한을 찬양하거나 아예 정치적 문제에는 입을 닫는다.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익들은 이를 부각하며 탈북민이 모두 우익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 체제 선전에 이용한다.

그러나 탈북민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아니다. 태영호 같은 극소수 고위직 출신 탈북민은 남한에서도 대접받으며 한국 부유층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탈북민은 푸대접을 받는다.

탈북민 주승현 씨는 저서 《조난자들》에서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참여한 탈북민 청년이 많았으며, “이는 ‘진보적 과정’에 참여해 서는 안 된다는, 탈북민 사회의 암묵적인 금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좌파는 탈북민을 방어해야 하고 우파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파들이 ‘인권 운운하는 좌파의 위선’이라며 파고들어 탈북민을 이용할 기회만 열려 줄 것이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온라인 토론회 방송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그동안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대표적 좌파 정당으로 인식돼 개혁 염원층의 표를 주로 받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 바람이 불고,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게 표가 쏠린 것을 감안해도 정의당의 낮아진 위상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정미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에 정의당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논란이다.

이정미 대표 사퇴 요구는 단순한 선거 책임론을 넘어 이정미 지도부의 총선 대응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지도부는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이 당명 변경 등을 통해 재창당을 하면, 그 당으로 녹색당 지도부와 총선 후보들이 입당해 단일 정당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정의당의 본체가 선거연합정당이 되는 것이므로 위성정당은 아니다.)

그런데 총선 당선자의 거취를 두고는 양당이 동상이몽이다. 녹색당은 최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 당선자들이 당선 후 녹색당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선거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녹색당 지지율도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 당연히 정의당 내에서는 ‘우리는 얻는 게 뭐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온건 중도화

무엇보다 이 방안에는 좌파적 원칙보다는 각자 총선에 임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들다는 실용주의가 엿보인다. (개혁 염원층의 요구에 따른 것도 아니라면, 왜 꼭 두 당만 연합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법하다.)

이정미 지도부의 방안에 당내 온건



이정미 대표가 기회주의적으로 내분을 봉합하려 할수록 개혁 염원 당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더 멀어질 것이다

파들이 결사 반대하며 이정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장혜영·류호정 의원이 소속된 ‘세 번째 권력’, 박원석 전 의원이 대표하는 ‘대안신당모임’, 김창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세부 전망은 각자 달라도 모두 급태섭·양향자 신당 등 비윤·비명의 제3지대 중도파들과 양당 구도에 대항하는 선거 연합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정의당과 진보의 간판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급태섭 전 의원은 검사 선배인 윤석열을 대선 때 도왔고, 지금 신당의 비전으로 사회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도 않다. 그 당의 대변인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민주당 용역 투쟁이라고 비난한다. ‘고졸 여성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올랐다는 입지전적 신화를 앞세워 민주당에 영입됐다’가 탈당한 양향자 의원은 친기업 기조가 분명하다.

이들과 연합한다면, (정의당 온건파들의 전망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민주당(이재명)과 윤석열 정부 사이에 자리 잡자는 것으로, 무엇보다 친제국주의와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선명하게 반대하지 말자는 방향인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서민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런 정서의 상당수가 개혁 염원 지지층이다. 제3지대 연합론은 이들을 대변하지 말자는 것으로, 선거 실용

주의이자 우경 기회주의 노선이다.

한편, 정의당 내 ‘전환’ 그룹은 이정미 사퇴 요구나 제3지대 연합론과는 옹골을 긋고 있다.

동시에 이정미 지도부의 선거연합정당안이 “명분도, 실리도,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한다. 전환은 정의당의 정치를 왼쪽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면, 내년 총선을 “진보정치연합 총선 체제”로 치르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 4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이 함께할 방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회주의

2012년 창당 후 정의당은 민주당(물론 그중 개혁파를 염두에 두고)과의 연립정부를 목표로 해 왔고, 의회주의적 실천을 해 왔다.

정의당 지도자들은 좌파 정치의 책무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를 맞는 것(투쟁 동참과 건설)보다 개혁 입법으로 우산을 쥐여 주는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정치(투쟁)를 입법 협상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고, 이때 정치(투쟁)의 주체는 선출된 개혁주의 정치인인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당선이 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개혁 염원층을 독심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득표를 위해 상층 계급과 후진적 대중을 더 의식하게 된다.

최근 급태섭 신당 합류파인 류호정

의원은 새로운 정당이 “꼭 진보정당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선 지상주의가 결국 무원칙한 실용주의로 이어짐을 드러낸다.

사실, 윤석열의 정적 탄압이자 본질적으로 사법절차에서의 민주적 권리 침해 문제였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정의당 의원단이 가결표를 던진 것도 기회주의의 발로였다.

당의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선거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니 의원단에서부터 원심력이 커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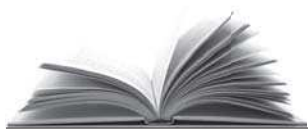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비판적 협력으로 개혁을 대중에게 선물하겠다는 노선을 추구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이 문재인 정부로 향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일들은 노동자 투쟁들이 급진화되고 정치화되고 전면화되도록 노력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런 산발적이고 단편화하는 효과들이 누적된 결과, 정의당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도 크게 하락한 것이다.

지금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것과 추상적인 양당제 비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비판의 기준도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정미 대표는 10월 29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급태섭·양향자 신당 등과 합당은 안 하지만 총선 연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회주의적으로 당의 분열을 봉합하려 한 것이다. 그럴수록 개혁 염원 당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더 멀어질 것이다.

김문성



서평 |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다. 혐오표현 금지는 특히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도 많이 지지받는 요구다.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아르테 출판, 2023)의 저자 네이딘 스트로슨은 이런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이고, “중학교에서부터 ... 다양한 평등주의 운동을 하던 학생운동가”였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 회장(1991~2008)을 역임한 저자는 미국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와 같은 운동이 성장한 것에 상당히 고무받았다.

그런데 세 세대 활동가 상당수가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저자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엄격한

이 책은 큰 장점이 있다. 첫째, 저자는 어떠한 종류의 혐오표현금지법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예컨대 ‘선동’에 초점을 맞춘 더 엄격한 혐오표현금지법이든, 전통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돼 온 집단을 향한 표현만 규제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이든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급진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것은 역자인 홍성수 교수를 포함해 혐오표현 규제 의 예외를 인정하는 여느 저명한 논자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둘째, 실력 있는 법학자답게 혐오표현금지법의 문제점을 치밀하고 설득적으로 논증한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혐오표현금지법은 “서로 다른 정도의 정확성과 너비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인 ‘혐오’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



프랑스 국가는 ‘유대인 혐오’라는 거짓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불허했다

범할 수밖에 없고 집행 당국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집행이 필연적이다.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막연하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을 억압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면 정부는 제한되지 않는 검열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권한 없는 사람들과 인기 없는 사상들”에 불리하게 행사되고, 종종 반대 의견이나 소수자 집단이 표적이 되며, 의견 표명이 상당히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집행돼 온 혐오표현금지법과 대학의 혐오표현 학칙, 관련 연구와 보고서들을 추적해 풍부한 사례를 들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 튀르키예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관리나 군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혐오표현금지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가 흔하다.
- 영국의 법이 규정한 혐오표현에는 전쟁에서 싸우는 영국 군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2012년 영국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해를 비난한 페이스 북 게시물을 올린 10대 무슬림 아즈하르 아흐메드가 이 법으로 체포됐다.
- 캐나다의 혐오표현금지법의 첫 번째 집행은 캐나다 세관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페미니스트 벨 후스가 쓴 《블랙 룩스: 인종과 재현》1500부(여러 대학이 주문한)를 압수한 것이다.
- 2004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틀르슈 법’의 입법 취지는 반유대주의와 반아랍 외국인 혐오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을 옹호하거나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데 거듭 사용됐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제정되거나 입안된 모든 혐오표현금지법을 추적하고 해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규정한 심각한 결함을 피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범위가 계속 확대돼 왔다는 저자의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이 기대하는 효과(혐오표현이나 그 해악 줄이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그것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논리적·경험적으로 밝히며 “대항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강력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있음에도 나치즘이 부활했다. 혐오표현금지법으로 나치가 기소됐을 때 오히려 나치를 순교자로 만들어 나치가 주목받고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게다가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권력자들(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인도의 라넨드라 모디 등)은 혐오를 부추겨도 그 나라의 혐오표현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항 표현

혐오표현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감정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그들이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도록 고무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하는 것(“대항 표현”)이 그 해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저자의 이런 견해는 <노동자 연대> 신문이 주장해 온 바와 많은 부분 통한다.



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옮김
arte(아르테), 332쪽, 28,000원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는 한계도 있다.

우선, 마르크스주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할 때 정치적으로 누구의, 무엇을 말할 자유인지를 묻고, 좌파의 투쟁과 단결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하지만 저자에게 이 점이 분명하지는 않다.

천대받는 대중의 운동에 해로운 주장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한다면, 우익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 때 이를 의도치 않게 감싸게 되거나 (그에 맞서는 운동이) 마비될 수 있다. (관련 기사 8면)

다음으로, 저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긴급성 원칙”(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심각한 해악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그리고 임박하게 야기하는 경우)에 따른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긴급성 원칙”도 결국 국가가 판단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금지법의 근본 난점을 공유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보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숨어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저자가 커다란 존경을 보내는 미국연방대법원 포함) 본질적으로 노동계급과 급진적 좌파에게 적대적이다.

혐오표현과 차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 운동이라는 점도 저자와 마르크스주의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성지현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10월 26일 대법원이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서 쓴 책”이라는 헛소리를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며 멸한 박유하가 ‘사상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듣기가 역겹다.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저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것이다. 박유하의 주장은 전쟁 범죄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지배자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뉴라이트가 박유하를 방어하고 나설 만했다.

특히, 박유하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묘사하는 등 그 피해자들을 심각하게 모욕했다. 위안소 포주나 일본군 출신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거나,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는 등 역겨운 주장을 늘어냈다.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대법원은 박유하의 이런 주장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며 합리화해 줬다. 도대체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였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그 범죄의 피해자를 모욕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거나,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는 등 역겨운 주장을 늘어냈다.

전쟁 범죄 피해자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며 존중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소송 초기에 유감스럽게도 좌파 일각에서 박유하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비난이 빗발치자 거의 잦아들었지만 말이다.

모욕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잣대는 “누구의 자유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유”냐는 것이다.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주장을 표현의 자유라며 존중해 줄 수는 없다.

《제국의 위안부》출간 당시 좌파 진영이 항의 운동을 벌여 박유하의 주장을 공론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불가피하게 뉴라이트 등 우익의 지원을 받는 박유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유하를 고소한 아홉 명의 피해자 중 세 명만 살아계신다. 이번 판결 직후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할머니들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세 분 모두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 박 교수 책은 거짓이라고 하신다.”

주류 언론들은 박유하를 옹호하며 무죄 판결이 왜 이토록 오래 걸렸냐며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상식 확인하는데 6년 걸려야 했나” 제하의 사설을 냈고, 전경련의 나팔수 <한국경제>는 “지연된 정의” 운운했다.

한편, 판결 이후 의기양양해진 박유하는 위안부 운동에 대한 비방과 색깔론을 폈다. 위안부 운동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반해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식민지 배상을 북한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위안부 문제 운동의 감추어진 목적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박유하가 위안부 운동을 비난한 것을 길게 인용해 보도했다. 박유하 무죄 판결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미·일의 서방 제국주의와 협력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염원을 내쳐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는 합의를 기시다 정부와 맺었다.

이재혁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11·4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의 전면적 지상군 침공 규탄 대량학살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팔레스타인에 연대!

11월 4일(토) 오후 3시 |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남측 청계북로)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 010-7550-2131

행진 경로
집회장
→ 을지로입구역
→ 시청역
→ 광화문역
→ 종각역
→ 집회장